정치권 '美 쇠고기 수입' 공방 가열

與 "국민불안 악용 선동 말라…시위에 정치적 배후 의혹"

野 "재협상 나서라"…농수산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검토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인터넷 서명운동, 촛불시위 등 쇠고기 논란의 배후에 정치적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 정치적 선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민 반발을 정치적 갈등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은 전면 쇠고기 재협상을 거듭 요구하면서 관계 장관 해임건의안 및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의 검토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6일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일 국회 쇠고기 청문회를 개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4일 "무조건적으로 선동적인 촛불시위나 서명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악용해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라면서 이성적 대처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건강"이라면서 "건강을 보호할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지, 이를 정치적 이념이나 나아가 대미관계,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얕은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김대은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촛불집회는 정부에 반대해온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 인터넷 카페가 주최했는데 이 카페 운영자는 전 열린우리당 당원이자 현 창조한국당 당원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어제 촛불집회를 국민 불안을 유발한 좌파세력 음모로 규정했는 데 이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상식에 대한 테러"라며 "한나라당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5일 오전 쇠고기협상무효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수 사무총장) 1차회의를 열고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을 위한 세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특별법과 통상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 7일 쇠고기 청문회 이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4일 현안브리핑에서 "쇠고기 완전항복 협상이 무효인 만큼 재협상으로 가기 위한 법률적 안내자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장관 고시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쇠고기 협상을 중지시키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내법(특별법)과 국제법(통상조약)간 법률적 충돌이 가능한 지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창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이미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 확산과 관련 당·정·청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 가능성 있다" VS "안전성 이미 확보"

'광우병 쇠고기' 논란 속 전문가 의견도 제각각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키로 결정한 이후 일반인들 사이에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광우병의 감염 경로와 발병 후 증상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놓고 네티즌들간에 설전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광우병에 대한 이런 논란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염 가능성은?= 광우병 감염소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변형프리온 단백질이 다른 부위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상반된 주장이다.

서울대수의대 우희종 교수도 "저농도 프리온 단백질에 의한 광우병 발병은 당연하다. 살코기에도 혈액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미 보고된 사례가 있다"면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대수의대 이영순 교수는 "현재 미국서 사육되고 있는 소가 1억마리가 넘고, 1년에 최소 3천300만에서 4천만마리가 도축된다. 하지만 이제껏 미국서 확인된 광우병 소는 3마리다. 이는 그만큼 위험성이 적다는 얘기"라며 "이게 바로 역학이라는 학문이다"고 반박했다.

◇육수나 2차 가공품은 괜찮은가=일부는 변형프리온 단백질의 특성상 고온에서도 죽지 않기 때문에 끓여서 먹거나 2차 가공품으로 재가공해도 그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입장이지만 감염위험물질(SRM) 제거한 경우에는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희종 교수는 "만약 광우병에 걸린 소의 도축 과정에서 다른 부위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전염됐다면 당연히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식의 전염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질병의 특성상 예방차원에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순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른 도축·가공 과정에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SRM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육수나 2차적인 가공품에 의해 감염될 위험은 전혀 없다"면서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안전성은 이미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논란의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간광우병 환자가 모두 유전형 mm을 갖고 있고 한국인의 95%가 이 유전형이기 때문이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문제의 연구결과만으로는 유전자형이 질병의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특정 유전자형에서 잠복기가 짧아서 먼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정례 모친 영장 기각…法-檢 갈등 재연되나

공천대가로 친박연대에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의 모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검찰의 해묵은 영장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부터 18대 총선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공천헌금' 문제를 수사중인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는 물론 '당 공식 계좌로 실명 입금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고 있으나 검찰은 4일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작년에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때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을 겪었다.

2006년에는 특수수사의 상징인 중수부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차례나 기각되는 등 9개월 가량 진행된 '론스타 수사'에서 체포·구속영장이 12번 기각돼 영장갈등이 극에 달했었다.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은 주요 사건 때마다 반복되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주거불분명·증거인멸우려·도주우려 등의 사정이 없으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수사 등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제도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美 '쇠고기' 긴급 기자회견

미국 정부가 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의심에 대해 반박한데 이어 4일(현지 시간·한국 시간 5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등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미국은 3일(현지 시간) 미국 내에서 생산된 쇠고기 가운데 96%를 미국인들이 소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이 자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의심해 호주에서 수입된 쇠고기를 먹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은 또 4일(현지 시간) 오후 5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등과 관련, 농무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 남겨라"

4일 긴급 당청정 회의에서 정부에 요구

한나라당은 4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갖고 대미 쇠고기 수입 재논의 및 우리측 검역관 미국 파견 가능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간사인 홍문표 의원 등이,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청와대 김중수 경제수석, 박재완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는 대만, 일본의 (협상) 내용이 우리와 다르면 재논의가 가능한 것 아니냐. 정부가 미리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는 "대만이 곧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는 데 우리와 (협상 조건이) 다르면 언제든지 재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에 검역관을 상주시켜서 (도축 과정을) 검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광우병 심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국제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는 재협상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런 중요한 말을 어떻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前 대표 11일부터 호주·뉴질랜드 방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11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문에서 박 전 대표는 호주의 퍼스와 캔버라, 시드니 및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을 잇따라 찾아 양국 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면담하고 산업시찰과 교민간담회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